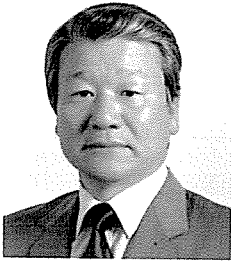


“인구정책방향을 바로 잡자”



李時伯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뮤르달교수는 1960년대 아시아 개도국의 빈곤을 분석하고 그의 유명한 저서 「아시아의 드라마」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 그는 빈곤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열악한 인구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개도국에서 인구정책을 경제정책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이유도 뮤르달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80년대후 인구정책 방입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이래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제개발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가로 알려져 왔는데, 1980년대 말부터 개발의지를 담은 인구정책은 사라지고 최근에 이르러까지 거의 방임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두가지다. 첫째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 수준은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사고때문이며, 둘째는 지속적인 저출산력 수준이 유지될 경우,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향후 인력수급의 차질을 초래한다는 염려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잘못된 판단이다.

우선, 출산력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위험한 사고다. 원래 출산자녀수의

정도를 나타내는 출산력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소산물인데, 우리나라는 원래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아들낳기를 원하는 다출산 남아선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의 주도적이고 강력한 출산조절정책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단기간 내에 낮은 출산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력은 짧은 기간 동안에 국가정책에 의해 유도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자녀 규범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인구정책이 없을 경우에도 낮은 출산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력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백50여년에 걸쳐 사회문화적 변동에 의해 안정된 출산형태가 형성된 서구 선진국가와는 그 유형이 다르다.

따라서 국가 인구정책이 분명치 못한 상태에서는 쉽게 과거 전통적인 출산형태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 실제로 장래 인구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을 보면 현재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세 미만의 미성년 부인과 30세 이상의 고령 부인들의 출산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인구정책 부재현상의 결과로 보여져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多出産, 男兒 선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강력한 출산조절정책으로 출산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생산현장의 노동인력 부족만을 염려하여 출산장려쪽으로 선회하고자 하는 인구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男兒 선호영향 低出産 불안

그리고 앞으로의 자녀출산수를 예고 할 수 있는 희망 자녀수에 대한 태도도 3명 또는 4명의 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21세기를 눈 앞에 둔 현대 문명사회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통문화의 유산인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지표변동을 통하여 판단할 때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출산력을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낙관할 수 없는 징후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수준에 만족하여 앞으로 계속 출산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삼폐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실패작의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의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발전 속도를 의식하면서 저출산력이 지속될 경우에 장래 노동인력 수급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이며 사고의 방향착오다. 개발도상국가의 출산조절정책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출산조절정책에 의하여 출생률을 저하시키면 인구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인구구조는 점차적으로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변화한다. 만일 어느 개발도상국가에서 출산조절정책이 15~20년 동안 효과적으로 지속된다면 소비연령층인 0~14세 유년인구비율이 감소되고 생산연령층인 15~64세의 인구비율은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0~14세 유년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15~64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 부양비가 점진적으

로 가벼워지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인구의 기여도가 높다고 말한다. 반대로 출산조절정책의 실패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0~14세의 유년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부양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유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논리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력을 기반으로 한 인구계획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출산력이 낮아지면서 생산연령층 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장래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염려로써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저출산력정책의 방향을 출산촉진쪽으로 전환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주장의 요지는 인구성장의 둔화가 경제발전이 기여할 수 있다기 보다는 저출산력이 계속될 경우,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장래 노동인력이 부족하여 경제발전이 저해된다는 새로운 해석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단기적 안목에서 나온 주장인데 두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

산업인력 위한 조절은 안된다

첫째, 1990년 이후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연간 경제활동인구 증가비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체 규모에 있어서는 약 8백72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만한 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향후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미래의 산업발전은 노동인력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기술 혁신과 시설확충 그리고 노동의 질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오늘날 세계 모든 선진국가들도 과거 인구변천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노동인력 수급문제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으면서도 계속 저출산 상태에서 높은 경제수준을 견지해 온 사실을 관찰할 때, 노동인력 수급요인이 결코 경제발전의 유일한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삼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둘째, 출산장려로 미래의 산업인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력개발의 경제성을 생각하지 못한 발상으로 옳지 못하다. 즉, 한사람의 인력이 출생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연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15~20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 부양 등을 포함한 막대한 직·간접 비용의 지불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장의 생산 경쟁력을 감안할 때, 출산을 장려하여 20년 후의 미래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공급하여 산업을 육성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납득하기 곤란한 전근대적인 사고다. 20년 후의 인력공급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출산을 장려하자고 주장하기 보다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의 혁신, 그리고 새로운 정보관리를 통하여 생산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첨단의 생산기술과 시설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경쟁하는 21세기 산업형태로 바꾸어 세계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생산현장의 노동자 부족현상만을 염려하고 전체적인 인구현실을 잘못 파악하여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하고자 하는 인구정책의 방향은 하루 빨리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①7